

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

【청소자원과장 : 송권식 / 청소기획팀장 : 최 혁 / 주무관 : 토목9급 송석원】

연락처(☎) : 2600-4058

정장훈 의원 서면질문 내용

(1) 마곡환경플랜트(마곡소각장) 건설 계획에 대한 강서구의 입장 등

□ 답변내용 ----- (청소자원과)

- 우리구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장훈 의원 및 박성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, 마곡환경플랜트(마곡소각장) 건설계획에 대한 강서구의 입장 및 마곡지구내 소각장 건립 재검토에 대한 현재 상황 등 그동안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.
- 먼저 마곡환경플랜트는 소각장, 자동집하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을 포함하는 사업으로 마곡동 260번지 일원을 건립지로 결정하고 지난 2009년 9월 2일 강서구와 SH공사 간에 협약서를 체결하여 그동안 추진하여 오던 중
- 건립예정지가 양천초등학교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항공도제한으로 인한 연돌의 높이의 제한과 구도심지역에 인접하고 있어 인근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건립이 중단되었습니다.
- 민선 6기에 들어서 소각장 건립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2011년 4월에 우리구 자체 용역을 발주하여 중간보고시 용역사로부터 재정투자대비 비효율적이고 건립후 운영비가 과다, 구도심 인근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우리구에서는 2011년 5월 2일 마곡지구내 소각장의 건립반대의견을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그동안 서울시 현안회의 등을 통하여 약 12회에 걸쳐 강서구의 건립반대의견을 일관되게 주장하여 오고 있습니다.
- 이후 서울시에서는 소각장 건립부지를 변경하여 추진하려는 보도를 발표하였으나 인근지역인 등촌3동지역 주민들이 반대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제출하는 등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우리구와 재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.
- 지난 2011년 8월 22일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강서구청장을 방문하여 3개의

대안을 제시한 바 제1안은 부천시의 소각장 증설에 강서구가 참여하는 방안과 제2안으로 강서구가 오곡동에 자체처리시설의 건립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 두가지 안의 추진이 불가능할 시 마곡지역내에 소각장을 건립하겠다는 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.

-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지난 2011년 8월이후 부천시와 소각장 공동이용을 위하여 끊임 없이 협의를 실시하여 왔으며, 그 동안 잘 추진되어 왔던 협의가 부천시에서 화장장의 공동이용 등의 전제조건 등을 제시하여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.
- 향후 부천시의 여건변화 등을 대비하여 우리구는 부천시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만일, 부천시와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오곡동일원에 우리구 자체 소각장의 건립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.
- 아울러,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30만㎡ 이상의 택지개발시 사업지구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구청장에게 설치납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소각장 건립대신 설치납부금을 납부하여 줄 것을 서울시와 SH공사에 요청하였고
- 그리고 서울시에서 우리구의 추진의지에 대한 이행담보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현재 관련조례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,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향후 구의회에 상정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우리구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서울시에 통보할 계획입니다.
-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구의 입장은 마곡지구내의 소각장건립은 절대반대임을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

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

(서면질문)

【행정지원과장 : 안택순 / 인사팀장 : 김광식 / 주무관 : 행정6급 김기환】

연락처(☎) : 2600-6034

정장훈 의원 구정질문 내용

2) 4. 11 총선에 있어서 강서구청의 관권선거 시비와 의혹에 대한 해명

□ 답변내용 ----- (행정지원과)

- 정장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. 11 총선과 관련 강서구청의 관권선거 시비와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.
-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등에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
- 강서구 공무원 신분으로 4. 11 총선에 개입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며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고소건에 대해 이미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.